

# 우리금융 9개 계열사 CEO 물갈이... 이원덕 행장은 '사의'

임종룡 號 출범 앞두고 조직개편 혁신·미래경쟁력 확보에 방점 총괄사장제·수석부사장제 폐지 지주 임원 11명→7명으로 축소 전체 인력도 약 20% 정도 감축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신임 회장 취임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자회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사 14개 중 은행 포함 9개 자회사 대표를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조직혁신과 미래경쟁력 확보라는 신임 회장의 경영 전략 방향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우리카드 대표에 박완식 우리은행 개인·기관그룹장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에는 조병규 우리은행 기업그룹장을 각각 추천했다. 우리종합금융 대표에는 김응철 우리은행 외환그룹장을 내정했다.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이종근 우리금융 경영지원부문 전무,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는 전상욱

우리금융 미래성장총괄 사장이 맡는다.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에는 김정록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을 추천했고, 우리자산운용 대표에는 외부 출신인 남기천 전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를 영입했다. 이들 CEO는 오는 22~23일 각사 주주총회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각 자회사는 신임 대표가 부담하는 즉시 지

주사의 기본 전략에 맞춰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올해 연말까지 임기가 남아있지만 임 내정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에서 사의 표명을 했다. 후임 은행장은 임 회장 취임 직후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회사 CEO 추천은 우리금융의 자회사들의 업종 특성을 감안해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임종룡 회장 내정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또한 지주사를 '전략 수립, 시너지 창출, 조직문화 혁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예화했다.

먼저 총괄사장제(2인)와 수석부사장제를 폐지했고, 부문도 11개에서 9개로 축소해 지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지주 임원 역시 11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6명을 교체 임명했다. 지주 전체 인력은 약 20% 정도 감축하고 회장 비서실(본부장급)도 폐지했다.

또한 지주 부문장(9개)에 본부장급 인력 2명을 과감히 발탁 배치하는 등 조

직활력 제고를 위한 세대교체형 인사도 실시했다.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조직문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문화혁신TF(회장 및 자회사CEO 협의체)'를 회장 직속으로 신설했다. 해당 TF조직은 앞으로 그룹 차원의 기업문화혁신(인사 및 평가제도 개편, 내부통제 강화, 경영 승계프로그램 등) 전략을 수립해 실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첫 조직개편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미래성장 추진력 강화로 미래사업추진부문을 신설했다. 증권사 인수 등 비은행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그룹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 금융권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른 ESG경영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 개혁의 촉매제가 될 과감한 경영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한 만큼 새로 출범하는 즉시 신임 회장이 그려온 경영 로드맵대로 빠르게 영업속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또한 지주 전략 중심에서

자회사 영업 중심이라는 방향에 맞춰 은행 조직을 영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영업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영업총괄그룹은 폐지하는 대신 국내영업부문과 기업투자금융부문 등 부문 2곳으로 재편했다. 각 부문 산하에 5개, 4개의 주요 영업 관련 그룹들을 배치했다. 다만 부문장 자리는 각각 개인그룹장과 기업그룹장이 겸직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그룹과 연금사업그룹, 기관그룹을 신설해 신성장기업 대상 영업 및 기관 영업 시장, 연금시장 등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상생금융부를 새롭게 신설해 금융소외계층 전담 상품과 서비스 지원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 수를 19명에서 18명으로 감축하고, 총 18명 중 12명을 교체 배치했다. 3개의 그룹장 자리에 영업실적이 뛰어난 여성본부장 등 영업 현장 중심의 본부장급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1면 '유통가, 사명고체 바람'서 계속

## “피해자 존중 하면서 韓·日 미래발전 모색한 결과”

尹 대통령, 강제징용 해법 관련 발언 “日, 과거 침략자서 現 협력 파트너로 양국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절 기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

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여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의 기자 pathfinder@

## 한국야쿠르트 지운 hy 유통 전문기업 새출발

또 커피전문점 ‘폴바셋’과 중식당 ‘크리스탈제이드’ 등 외식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CJ제일제당도 과거 비슷한 이유로 사명 변경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식품업계가 우유면 우유, 과자면 과자 등 한정된 카테고리 상품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신사업과 해외 사업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hy의 경우 지난 2021년 50년 넘게 사용한 사명 ‘한국야쿠르트’를 지우고 유통전문기업으로의 새 출발을 선포하며 사명 변경을 단행한 바 있다.

발효사업 외에 프레스매니저를 기반으로 한 물류 사업과 유산균 기술력을 활용한 균주 B2B 사업을 강화하는 과감한 업의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회사 인터넷쇼핑몰도 ‘프레딤’으로 개편하고 판매 품목을 타사 제품까지 넓혔다. 현재 HMR, 신선식품, 이유식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배송망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입점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직과 브랜드 재정비의 일환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도 있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지난해 종로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대상웰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새 사명인 ‘대상웰라이프’는 건강함, 좋음을 뜻하는 웰(Well)과 삶을 뜻하는 라이프(Life)를 합친 이름으로, 고객이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여정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철학과 지향점을 담았다. 사명 변경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기업 철학을 전달하고 친숙한 기업 이미지를 다진다는 복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소하천 정비때 경관 훼손 OK?... ‘환경보전법’ 우려 목소리

환경부,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시행 “이·치수, 재해예방 사업이 대부분 경관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난개발에 생태계 파괴” 지적도

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는데 불필요하게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km 이상인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

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 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정비 사업은 연평균 100건 정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 사업도 물 관리가 필수인데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은 물론 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개발과 경제 논리에 밀려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 영향 심의 등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27일 환경부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사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건부 동의’했다. 이로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속적인 소음 등이 야생생물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함께 법정보호 식물, 특이 식물 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